

국회發 '금융중심지' 쟁탈전

부산 vs 전북

產銀·수은 이전 벌써 김칫국

"해외바이어 접촉시 서울이 편리
지방 이전땐 금융정책에 어려움"
산은·수은, 이전에 부정적 입장

금융 공공기관 지방이전 논의가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산업·수출입은행 등 당초가 큰 금융 공공기관을 전북과 부산에 유치해 금융중심지의 자생력을 키우겠다는 포석이다. 하지만 정작 해당 기관은 금융기관으로 역할수행이 어려울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은 내비친 상황이어서 합의점을 찾기 쉽지 않아보인다.

13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김광수 의원(전주 갑)과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구)은 각각 전북과 부산으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본점을 이전하는 일부 개정 법안을 발의했다.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는 산업은행법과 수출입은행법을 개정해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부산이나 금융중심지로 논의되고 있는 전북으로 이전하겠다는 설명이다.

현재 전북은 전북혁신도시의 제3금융 중심지 지정이 유력하다고 보고 두 은행의 지방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전북의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지역공약에도 포함된 데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관련 내용이 담겨 있다. 김광수 의원은 "위기에 빠진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반드시 전북이 제3금융중심지로 지정돼야 한다"면서 "금융 중심지로서 제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두 금융기관 이전도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부산은 제2금융중심지인 부산문화금융단지가 자리를 잡지 못했기 때문

(산업은행·수출입은행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제안일자	의안명	내용
김광수 의원 등 12인	2019.02.07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수출입은행의 본점을 전라북도에 두도록함(안 제3조제1항)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은행 본점을 부산광역시에 두도록함(안 제4조제1항)
김해영 의원 등 19인	2019.03.12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출입은행 본점을 부산광역시에 두도록 함(안 제3조제1항)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은행 본점을 부산광역시에 두도록함(안 제4조제1항)

/자료=의안정보시스템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전경 /각 사

에 두 은행이 부산으로 이전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금융중심지 를 추가하기보단 지정된 서울과 부산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의원은 "부산이 금융중심지로서 제대로 성장하기 위해선 금융기관 추가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이외에도 여러 기업과의 소통을 위해서라도 서울에 위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산업은행 노동조합 관계자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할 수 있지만 금융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흘어지면 금융정책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도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두고 막판 고심하고 있다. 대통령 공약을 이유로 밀어붙이기도, 그렇다고 중간에 접기도 어려운 처지여서다. 금융위는 전북을 제3금융중심지로 선정하는 것과 관련해 이달 중 논의할 방침이었지만 계획과 달리 일정은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금융중심지정책 관계자는 "전북을 제3금융중심지로 선정하는 것과 관련해선 아직까지 확인된 바 없다"며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 계획도 잡혀있지 않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하지만 정작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이러한 방안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기업 금융수요 대부분이 서울

2040 수도권 글로벌 메가플랜 나온다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국토부·서울시·인천시·경기도
2020년 상반기 계획안, 연말 확정

국토교통부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와 함께 '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

광역도시계획은 국토계획법에서 규정

한 최상위 도시계획이다.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공간구조개편, 광역토지이용, 도시기능분담 등을 제시한다. '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은 지난 2007년 7월 국토부가 이를 자체화 공동으로 수립하고 2009년 5월 한 차례 변경한 바 있다. 이번에 수립되는 광역도시계획은 국토·도시 계획 재정비 시기에 맞춰 광역적 교통 및 환경 문제를 해소하고, 인구감소와 저성장 시대에 맞는 실효적인 수도권 발전계획을 수립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4개 기관은 광역도시계획의 원활한 수립을 위해 광역도시계획 협의회를 구성하고 공개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은 내년 상반기에 계획안이 마련되고 하반기 중 양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0년 말 최종 확정된다. 수도권 외에 현재 수립된 부산권과 광주권 등 13개 광역도시계획도 내년 말 재수립 될 예정이다.

도시정책과 이상주 과장은 "그간 광역도시계획이 실효성이 떨어지고 개발제한 구역 조정에만 치중해 왔다는 일부 비판이 있었다"며 "이번에는 수도권의 교통, 환경 등 다양한 현안을 해결하는 실효적인 도시계획을 만들 방침"이라고 말했다.

/채신화 기자 csh9101@

2019년 고부가가치 직종
전문인력 양성 직업교육훈련

새길 남부여성새로일하기센터

웹콘텐츠디자이너 양성과정 고육생 모집

교육기간

2019.3.25 ~ 8.9 (월~금, 14:00~18:00)

교육내용

- 그래픽디자인(포토샵, 일러스트, 편집디자인)
- 웹퍼블리싱(html5, css, JavaScript/jQuery)
- 쇼핑몰 제작(브랜딩, 기획운영, 디자인)
- 현장견학, 현장실습

참가대상

초대졸 이상 취업희망 여성
*20~30대 청년중 6개월이내 졸업예정자 참여가능

접수방법

방문 및 이메일(nambu@seoulwomanup.or.kr)

접수기한

3.20(수) 18시까지(*면접일정 개별통보)

* 본 과정은 여성가족부가 지원하는 직업교육훈련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만 신청 가능합니다.



서울특별시남부여성발전센터

서울시 금천구 독산로 50길 23 ☎ 02)802-0922

남부여성발전센터 ▶

검색하세요~!

섀도보팅 폐지 후폭풍 주총 정족수 확보 비상

"코스닥 상장사 IR 담당자가 여의도에 모이고 있어요."

12월 결산법인의 주주총회를 앞두고 기업설명회(IR) 담당자가 동분서주하고 있다. 특히 감사인 선임 등 특별안건을 처리해야 하는 상장사는 정족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소액주주들은 물론 기관투자자로부터 위임장을 받기 위해 여의도를 찾는 IR 담당자들이 부쩍 늘었다.

◆ 돈 없으면 발품 팔아야…

13일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이번주에만 상장사 120곳이 정기 주총을 개최한다. 특히 오는 15일에는 LG전자, 아모레퍼시픽, 신세계 등 무려 100여개사의 주총이 몰려 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올해 주총에서 1928개 상장법인 가운데 약 8%에 해당하는 154곳이 정족수 미달로 감사선임에 실패할 것으로 추산했다. 지난 해(56개사)보다 3배 많은 기업들이 주총대란을 겪게 된다는 의미다.

2017년까지는

주총대란이 큰

문제가 아니었다. 바로 섀도보팅 제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섀도보팅은 주총 참석이 어려운 주주들 대신 예탁결제원이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주총에 참석한 주주들이 찬성 또는 반대한 비율과 똑같은 비율로 투표한다.

하지만 섀도보팅이 주주 의결권을 왜곡한다는 지적에 따라 2017년 말 폐지됐다. 현재 상장사들이 의결권 확보에 비상이 걸린 것은 이때부터다. 실제 지난해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처리하지 못한 안건은 96건에 이른다. 2017년(9건)보다 10배 가량 급증했다.

국내에만 존재한 '3%'률도 발목을 잡고 있다. 감사 선임안 통과에는 발행 주식 25%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 때 최대주주 지분은 3%까지로 제한된다. 50%의 지분이 있어도 최대주주의 결권은 3%까지만 인정해 준다는 뜻이다. 소액주주 절반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상장사 IR 담당자들이 위임장을 받기 위해 여의도의 기관투자자를 찾아오는 이유다. 또 주주명부에 적힌 개인 투자자의 집을 노크해야 하는 상황도 하다하�다.

제도는 변했지만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다. 예탁결제원이 건네는 주주명부에는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주주의 연락처가 적혀있지 않다. 주주에 대한

정보는 집 주소 하나다. 하지만 이미 여의도 등본상의 주소가 아니라 주식을 매수한 증권사 가입 당시 주소여서 실거주지가 아닐 확률이 높다.

한 상장사 IR 담당자는 "지방에 사는 주주들도 많아서 팀원 전부가 위임장을 받기 위해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다. 집을 찾아가도 이미 이사를 갔거나 주소지가 다른 경우가 많아서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의결권 위임을 대행해 주는 업체를 찾는 상장사도 늘어나고 있다. 기업이 주주명부를 주면 대행업체가 대신 주주들의 위임장을 받아오는 식이다.

이 마저도 돈이 없으면 이용이 불가능하다. 대행비용은 주주구성, 지분 비율에 따라 달라는데 '억' 단위는 예사로 넘어가기도 한다. 주총을 위해 매년 억 단위의 돈을 쓸 수 있는 코스닥 상장사는 많지 않다.

한 코스닥 IR 담당자는 "의결권 대행사를 이용하는 코스닥 기업 IR 담당자는 그나마 행복한 것"이라며

"돈이 없으니 모든 직원들이 직접 발로 뛰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법적 대응 준비 중'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코스닥 상장사는 주총을 포기하고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상법상 감사선임이 불발되면 회사는 과태료 5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 감사 교체를 하지 못하면 현재 감사가 1년간 감사직을 그대로 이어가게 된다. 임시주총을 열수는 있지만 3%률이 있는 한 어떻게 해도 감사를 선임할 방법이 없다고 판단한 기업들이 주총을 포기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

일부 코스닥 상장사들은 코스닥협회의 도움을 받아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감사 선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과 더불어 실질적으로 3%률 폐지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한 IR 담당자는 "3%률은 대주주의 전횡을 막기 위해 50년 전에 만들어진 법"이라면서 "지금은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기업 문화 선진화 등으로 감사의 독립성이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법의 효용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오히려 3%률이 주주의 의결권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라 고 말했다.

/손엄지 기자 sonumji301@

'신용카드 소득공제' 3년 연장 합의

당정청 "근로자 세부담 경감 공제"

당정청이 13일 당정청협의회를 열고 '신용카드소득공제 제도'를 3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정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는 당정청협의회 개최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알렸다. 민주당 소속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기획비서관 등이 이번 회의에 참석했다. [본지 3월 13일자 1면 참조]

김 간사에 따르면, 당정청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연장한 이유는 '민생 개선' 때문이다. 김 간사는 "신용카드소득공제 제도는 올해 일몰이 도래하지만 근로자 세부담 경감을 위한 보편적 공제로 운용된 점을 감안해 일몰을 3년 연장한다"고 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자영업자 사업 소득 파악을 위해 도입됐다. 그리고 이 공제를 통해 카드사용자들은 '총 급여액의 25%'를 넘는 신용카드 사용액의 15%를 300만원 한도에서 공제를 받았다. /우승준 기자 dn1114@